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정이슈 보고서

2013-01 2013/02/06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은?
- 정부의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편 방향 -

목 차

I. 정부의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편 방향? (농림축산부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II. MB 정부 농정 총체적 평가와 진단

III.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은?

IV. 지정토론 및 청중토론 녹취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12년 2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은?”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문의 전문임을 말씀드립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보도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그 밖의 문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박상희 실장(070-7165-0005, kwak121@chol.com)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정부의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편 방향? (농림축산부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1) 정부의 현행 식품안전관리 업무 현황

- 농산물 생산·유통, 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입, 수산물 생산·수입 관련 안전관리는 농식품부가 담당
 - 농산물 수입·가공·유통, 수산물 가공·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청 담당

<식품안전 관리체계도>

구분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통 (보관/운반등)	소비 (소매점, 식당)
	재배/사육/ 양식 등	수입	국내가공	수입		
농산식품	농식품부	식약청			식약청 농식품부(일부)*	
수산식품	농식품부	농식품부 (위탁업무)	식약청			
축산식품	농식품부(99개 축산가공품) *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청이 농식품부와 협의 후 설정					농식품부 (식육판매)
						식약청
예외	농식품부 규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가공식품(식약청)					

자료 : 2012년 국정감사 자료

-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변경)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농산물 안전 업무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로 변경 예정)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될 예정
 - 이에, 한농연 등의 농업인단체와 현장 농가들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2) 농식품부의 안전성 관리 유지 필요성

가.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 및 검토 부족

-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있어야 함. 그런데 농림수산 식품부가 식품 안전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면서 큰 성과가 있었고 오히려 타 부처가 동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큰 문제가 발생

※ 우선, 식약청이 식품 안전과 관리하여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아왔는지 의구심이 듭

- 과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잠시 `85년~`97년까지 축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이 축산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하면서 심각한 피해만 발생하였음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정된 `62년~`84년 농림부에서 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보건사회부로 이관 (`85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토론 한 번 없이 강제로 이관)

- * (사례 1) 1989년 우지 파동 : 삼양라면이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 사건 발생 13일 후 정부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발표. 삼양라면은 업계 1위를 회복하지 못함
- * (사례 2) 1995 소골 탄저병 파동 : 보건복지부에서 소골을 먹은 사람에게 탄저병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짐. 추후 조사 결과는 허위였음. 축산물 소비가 급감
- * (사례 3) 1995년 고름우유 파동 : 문제가 전혀 없는 우유를 농가만 탓하며 우왕좌왕, 우유 소비 위축

-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겪은 소비자·생산자 단체 청원, 행쇄위 결정, 국회 의결을 통해 98년부터 농식품부로 환원 후 획기적 발전
-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 관리로 획기적 위생개선 (소비자 만족 제고)
 - (사례 1) 고기의 위생 수준(미생물)이 100배 개선되어 선진국인 미

국 수준을 달성

- (사례 2) 식육중 일반세균수 : ('97) 105-6/cm³ → ('11) 102-3/cm³으로 100배 개선
- (사례 3) 미생물 검사 위반율 : ('97) 3.4% → ('11) 0.07로 48배 개선
- (사례 4) 잔류물질 위반율 : ('97) 0.3% → ('11) 0.13로 3배 개선

- 그러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는 아직도 유사한 형태로 일반식품업계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2004년 불량 만두 파동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업체 사장 자살로 귀결)
 - 2005년 김치 기생충알 파동 (인체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김치 소비 위축, 중국 통상 분쟁, 일본 수출이 막힘)
 - 2012년 농심 라면(농심 라면이 최초에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회수, 국민 혼란 자초)로 우왕좌왕
 - 이같은 식약청의 미숙한 식품 안전 관리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위에서 제시된 식약청의 사례와 같이, 단속 위주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품 사고 발생시 원인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많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산업은 위축되고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식품 안전 업무를 소비자, 생산자, 관련기업, 국회 등 국민적 합의로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되었는데 다시 타 부처로 이관 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나. 식품산업의 진흥 업무와 안전 관리 연계는 필수적임

- 식량 부족시대에는 공급(증산)이 최우선시 되었지만,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우선시하는 것은 식품의 안전임
 - 실제, 특정 지역의 품질이 매우 좋은 농수축산물이 출하되어 많이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아주 극소량의 위해를 줄 수 있는

- 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이후에는 전혀 판매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임
- 이에,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장 큰 정책 목표가 농어가 소득향상과 함께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음

○ 또한, 농어업의 수준(발전)이 높아져야 농수축산물의 안전성도 함께 높아졌음

- 실제, 중국에서 불량 식품 제조·유통업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쓰레기 만두, 멜라민 분유 파동 등 불량 식품이 지속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은 중국 식품산업의 수준이 낮기 때문임

※ 농식품의 안전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 수준이 올라가야 하고 식품산업이 발전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생산부서에서 식품 안전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정주의에 빠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임(식품 진흥의 가장 큰 선결조건과 우선 순위는 식품안전이 때문임)
- 식품 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은 이원화될 수 없음. 예컨대 GAP 제도¹⁾의 경우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정 비료 시비 등 재배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생산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해야 함

※ 식품업체의 인허가 및 감독권은 식품안전 법령에 부여되어 있어, 식품 안전 법령을 관할하지 못하는 식품산업 육성 부처는 육성·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없음

-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식품 안전 업무의 전문성은, 종전의 불합리한 규제 위주에서 육성과 조화로 괄목할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 축산식품 수출이 가장 까다로운 미국에 삼계탕 수출 시장 개척 (2012년)
- 축산업 규모 : ('85~'97) 5~7조원 정체 → ('98~'11) 18조로 성장

1)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유통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하는 제도

- 식품 안전은 식품산업 진흥의 핵심이며, 수요자 관점에서 식품안전·영양산업진흥의 종합 관리가 필요
 - EU (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덴마크 식품농수산부,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등)는 식품선진국은 식품안전관리와 식품진흥을 단일부처에서 통합 관리

다. 질병과 위생의 분리는 비효율과 이중 규제의 문제가 발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처럼 농식품 질병·위생 관리가 이원화될 경우 농가는 이중 규제와 많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도축·집유장 관리는 생산(쇠고기, 우유 등)에 해당되고, 품질·질병(방역)관리와 위생업무가 혼재되어 있음
 - 통상 한 명의 검사관이 도축검사(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해 질병·위생 여부를 확인, 질병 확인시 도축을 금지시키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추적관리를 하는데
 - 인수위의 안처럼 방역(가축 질병)과 위생(인체 유해) 업무 분리시 두 기관의 이중 검사로 인해 이중 규제의 문제와 불필요한 지출 발생 등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업무 이원화시 수출업체는 검역증명서(질병 미발생)와 위생증명서(축산물 안전 검사)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함
- 식품 진흥의 핵심이 되는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일관 관리가 필수적임
 - 특히, 모든 발생하는 식품 안전의 문제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기반을 가진 부서가 안전 업무를 관리해야만 정책 성과(품질 및 안전성 향상)를 이룰 수 있음
 - 예컨대, HACCP 운영 기관인 HACCP기준원의 업무 비중으로 볼 때 농장에 대한 지정·관리 업무가 전체 업무 중에서 76.4%(‘12년 기준)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해야 함. HACCP기준원에서 차단방역, 농장시설, 농장위생, 동물약품 및 질병 관리에 대한 농가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음

라. 식품 안전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시해야 함

- 식품의 안전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함. 즉, 잔류 농약을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잔류 농약이 검출 되지 않도록 생산·유통·판매에서 철저한 관리·예방이 필요 함

※ 가축 질병중에는 광우병, 조류 독감 등 사람과 동물이 같이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아 위생과 방역이 함께 가야되는데 인수위안처럼 위생과 방역을 분산시키면 안전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됨

-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책임지는 기관이고 생산단계에서 농업인의 겪는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지만 식약청은 단속 건수가 실적·성과로 인식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단속·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실례로, 모 김치회사가 호텔에 김치를 납품하려고 숙성을 위해 주차장(상온)에 김치를 내놨는데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식약청에서 단속을 한 사례가 있음
 - 식약청과 같은 규제 위주의 기관이 생산 및 유통 단계에 대한 이해 없이 생산 단계를 포함해 모든 안전 관리 업무를 책임졌을 때 자칫 범법자만 대량으로 양산할 가능성이 큼
 - 이에 현장 농업인들의 협조를 받아 농산물 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계도를 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임

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변경 예정) 산하에서 동 업무를 담당할 경우 많은 비효율의 문제 발생

- 농축산물 위생관리는 현장 모니터링 및 집행·단속에 가까운 업무로서 총리실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조직·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국무총리실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무총리실은 집행 기능보다는 조정 기능(컨트롤 타워)을 담당해야 함

- 식품과 의약품은 관련성(승인·관리방법 및 유통구조 등)이 없고,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전문화해야 식품안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함
 - 현행대로 동시 관리할 경우 식품 안전 정책 추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음
 -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관리하는 기관은 선진국 중 미국 FDA가 유일하지만 현행 각 부처별 분산(주로 농업부, 보건부)된 식품안전관리, 수입검역검사를 유지하되 내용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식약청(FDA)이 있음에도 농업부(USDA)에 전담기관(FSIS)을 두고 축산 식품을 특별 관리하고 있음

3) 농식품부의 농식품 진흥 업무 유지 및 유지의 필요성

- 농가의 평균소득은 3천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2/3수준('07: 농가 72.9% → ' 11: 59.1)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으며, 식품산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때 농산업의 시너지효과와 농가소득 제고가 가 함
 - 쌀 10kg 제조가공 예시 : 쌀 20천원 → 햇반 100천원 → 떡 125천원 → 증류주 213천원

4) 외국 사례

- ※ 주요 선진국도 식품안전 관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 관리를 농 정부서가 담당하고, 평가 및 기준설정은 식약처가 하고 있으며,
- ※ 식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 안전성 평가(RA)와 식품안전성 관리(RM) 분리·운용 권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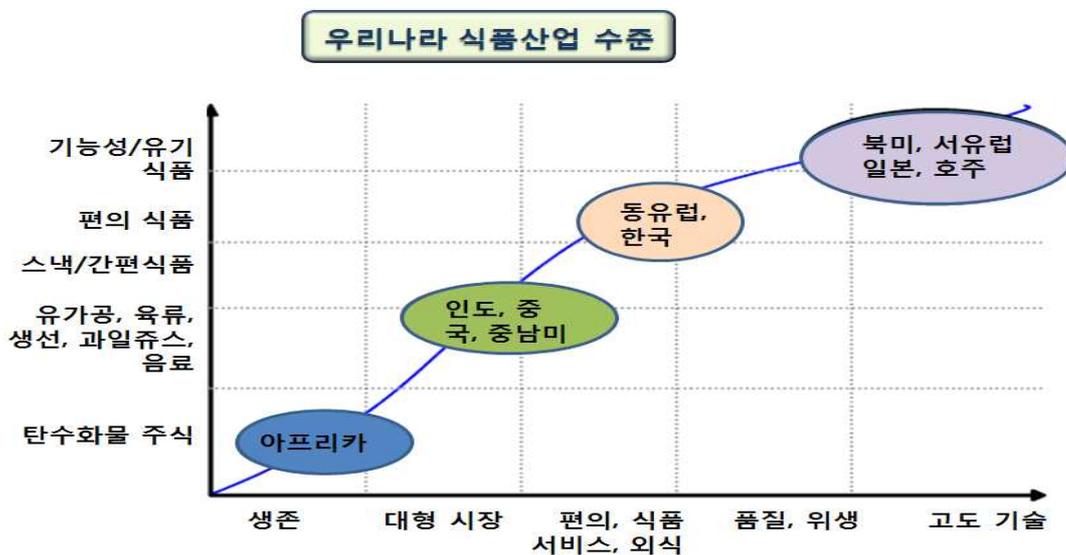
가. 선진국의 식품안전 체계 및 시사점

- 식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안전성 평가(RA)와 식품안전성 관리(RM) 분리·운용 권고
 - 평가(Risk assessment) : 위해요인 평가, 허용기준 설정 (예; 잔류 허용기준)

- 관리(Risk management) :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식품안전 관리
- 많은 선진국들은 식품안전 관리(RM) 측면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하면서도 식품안전성 평가(RA)는 별도 분리 운용
 - ① 통합형 :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하면서, 평가기능은 분리
 -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이 해당되며, 주로 농식품부처로 통합되어 관리
 - ② 총괄형 : 총괄기구를 두어 평가하되 집행업무 부처별 수행
 - 일본은 총리 소속 위원회에서 총괄·평가, 각 부처에서 집행
 - ③ 다원화 : 부처별 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각 소관 업무 관리 및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 (미국의 사례)

나. 세계 식품 산업의 여건 및 전망

- 세계 식품산업 시장규모('09)는 약 4.9조 달러로, '20년에는 6.4조 달러로 성장 예상 (Datamonitor, '09)
 - 세계 식품시장은 IT(3.5조), 자동차(1.6조)보다 약 1.4~10배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 서유럽·미국·일본은 기술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높고, 서유럽보다는 낮은 동유럽 수준
 - 식품산업 수준 : 서유럽 > 동유럽·한국 > 중국·중남미 > 아프리카



출처 : 네덜란드 푸드밸리

- 농식품 선진국인 네덜란드(푸드밸리), 스웨덴·덴마크(외레순) 등 서유럽 국가는 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식품매출 증대, 수출 향상, 고용 창출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동시에 시행중
 - 네덜란드의 경우, 식품의 매출액이 국가 총생산액의 약 10% 수준
 - 네덜란드 푸드밸리('07: 650억달러) vs 한국(37조원으로 총 GDP의 3.6%)

- 농식품 선진국은 선진 첨단 융복합 기술을 통해 식품산업의 안전성 확보 및 수출 촉진·고용 창출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나노 기술과 식품을 융·복합하여, 포장지 안에 식중독균이 발생하면 색깔이 변색되어 소비자가 인지하는 기술을 개발
 - 수출/고용 : (네덜란드) 325억달러/70만명, (덴마크·스웨덴) 980억달러/22만명

◇ 우리나라 식품산업도 서유럽 등의 식품 선진국처럼 나노·바이오·IT·우주 기술 등 고도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식품안전 수준의 근원적 향상 및 수출·고용 창출을 통한 국부 창출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5) 결론 및 제언

- 정부 기관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과 식품 안전 업무의 기능 조정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함
 - 그간, 식약청에서 안전 관리를 담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단순히 국무총리실 산하로 변경된다고 동 업무를 잘 수행할지는 의구심이 많이 듭
 - 특히, 위생과 방역(질병) 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농어가들에게는 이중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식품 안전 업무의 기능 조정은 불량 식품 근절 및 농수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 향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농식품의 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농장인데 농장의 안전 관리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생산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의 안전 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것에 반해 식약청은 농장 안전관리의 전문성(약학직 70% 차지)이 없으며 가축 질병 발생시 생산 현장 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함>
 - 농식품 안전 예방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농식품 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지도·예방 교육이 필수적인데 규제·처벌·단속을 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식약청은 한계가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가장 최우선시 되는 식품 안전(위생)을 위해 가장 열심히 할 기관은 어디인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안전의 동기부여가 가장 큰 기관이지만 식약청은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임>

- 이에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해야 함
 -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는 식품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총괄·기준 설정·평가)하고,
 - 식품안전 (일반 식품), 축산물 안전(방역·검역·검사), 농산물 안전 업무 등은 일원화하여 생산·사업 부서인 농정 부처가 담당해야 함
 -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내 검역검사본부를 확대·운영하거나 (가칭) 식품안전청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은 국민들을 위해 생산자들이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임. 식품안전의 담보 없이 산업의 발전을 논할 수 없음
 - 만약, 식품안전 일원화를 생산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식품안전 업무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폐지까지 논의해야 할 사안이 될 것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부서는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될 것임

- 식품안전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부처에서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특정 부처의 국장 자리 하나가 더 생길 것이냐 혹은 산하 기관이 더 생기게 되느냐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논의라고 생각함

II. MB 정부 농정 총체적 평가와 진단

- 한농연은 지난 2010년 4월 1일 이명박 정부 농정 중간 평가를 위해 현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35점이라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옴
- 이후 한농연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농정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00점 만점에 31.4점이 나와 오히려 중간평가 때 보다 현장 여론이 더욱 악화됐음을 알 수 있었음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 ▲농업에 대한 애정 및 철학 결여 ▲농업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 때문에 현장 농업인들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MB 정부 출범 이후 농업 초강대국인 미국과 EU와 FTA가 비준이 되고 중국과 FTA가 체결되어 농업인들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는 ‘돈버는 농업’, ‘성장 위주’의 농업정책 기조를 유지했지만 농가들의 소득 및 경영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 실제, 2005년~2010년 농업생산액은 35조 1,000억원에서 41조 7,000억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같은 기간 가구당 농업소득은 1,181만 5,000원에서 1,009만 8,0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음.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시(4.5배)에 비해 농촌이 양극화(11.7배)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임
- 이처럼 양극화가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 및 성장에 대한 혜택이 기업농 및 부농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증명함. 즉,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 농업의 성장이 현장 농가들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실제 대재벌인 동부그룹은 정부의 FTA이행지원기금을 지원받아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 등에 대규모 온실에 토마토를 재배하여 국내 농가와 큰 갈등을 빚고 있음

-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0대 대기업들은 자산, 계열사, 당기순이익 등 최소 30%~100%가 늘어났고 한-EU FTA(연평균 1.5조원), 한미 FTA(연평균 8.8조원)로 인해 엄청난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우리 농업계는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데 한-미 FTA, 한-EU FTA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이명박 정부 농정에 대해 현장 농업인들의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문이 바로 농업계라는 것을 주지해야 함

- 한농연 ‘18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
설문조사 결과 -

1. 기초 인적사항 조사

1. 농업계 활동 분야

농업인	정부	정부산하기관	농협	학계
124명 (58.3%)	7명 (3.3%)	16명 (7.5%)	9명 (4.2%)	34명 (16.0%)
민간기관	농민단체 실무자	기타	무응답	계
13명 (6.1%)	6명 (2.8%)	2명 (0.9%)	2명 (0.9%)	213명 (100%)

- 설문응답자 213명 중 농업계 활동 분야는 농업인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와 정부산하기관 순으로 많았음.

2. 전문 분야

통상	농가경제	협동조합	농촌복지	농업인력	지방농정
6명 (2.8%)	39명 (18.3%)	24명 (11.2%)	0명 (0%)	24명 (11.2%)	3명 (1.4%)
식품산업	농산물 유통	기타	무응답	계	
0명 (0%)	9명 (4.2%)	42명 (19.7%)	66명 (31.2%)	213명 (100%)	

- 전문 분야는 농가경제가 39명으로 많았고, 협동조합 24명, 농업인력 24명 순으로 많았음.

3. 농업계 종사 기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무응답	계
9명 (4.2%)	9명 (4.2%)	24명 (11.3%)	39명 (18.3%)	126명 (59.2%)	6명 (2.8%)	213명 (100%)

- 농업계 종사 기간은 20년 이상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 10~15년 순으로 분포되었음.

II. 이명박 정부 농정 평가 및 차기 정부 농정 관련 설문

1.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농정의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105명 (49.3%)	90명 (42.2%)	15명 (7.1%)	0명 (0%)	0명 (0%)	3명 (1.4%)	213명 (100%)

평점 : 1.57점 (5점 만점)

-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농정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05명으로 49.3%를 차지했고, 불만족도 90명으로 42.2%를 기록해 91.5%가 농정에 불만을 표함.

2. 이명박 정부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농가 경영환경과 농업 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낙후	낙후	보통	개선	매우 개선	무응답	계
72명 (36.6)	102명 (47.9%)	27명 (12.7%)	0명 (0%)	3명 (1.4%)	3명 (1.4%)	213명 (100%)

평점 : 1.80점 (5점 만점)

- 이명박 정부의 취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농가 경영환경과 농업 정책 방향 평가는 낙후가 102명 47.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낙후도 72명 36.6%로 이명박 정부 이후 경영환경이 낙후되었다는 평가가 84.5%를 차지함.

3.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3순위 내에 답한 비중)

구 분	계
1. FTA 피해대책 보완, FTA 추진 재검토 등 통상정책	138명
2. 직불금 확충, 정책자금 지원 체계 개선 등 소득정책	117명
3.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신경분리 등 협동조합정책	66명
4. 삶의 질 향상 계획 보완, 다문화가정 해결 등 농촌복지정책	42명
5. 후계인력, 농업인 교육 등 농업인력정책	72명
6. 산지조직화, 도소매 유통단계 효율화 등 농산물 유통정책	90명
7. 수입농산물 검역, 한식세계화 및 식품관리 일원화 등 식품 산업정책	30명
8. 농업관련 기관 재정립, 농업회의소 등 농정추진체계 개편	30명
9. 무응답	54명
합 계 (3순위까지 중복체크)	213명 ×3

-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는 FTA 피해대책 보완, FTA 추진 재검토 등 통상정책이 138명 응답자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2 순위로는 직불금 확충, 정책자금 지원 체계 개선 등 소득정책이 117명으로 뒤를 이었음.
- 세 번째로는 산지조직화, 도소매 유통단계 효율화 등 농산물 유통정책이 90명의 응답자를 기록함.

Ⅲ. 이명박 정부 세부 농정 평가 및 차기 정부가 고민해야 할 정책대안 사항 관련 설문

1. 정부의 ‘국제 통상’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한미, 한 EU FTA의 농산물 협상 결과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102명 (47.9%)	72명 (33.8%)	30명 (14.1%)	0명 (0%)	0명 (0%)	9명 (4.2%)	213명 (100%)

평점 : 1.65점 (5점 만점)

- 한미, 한EU FTA의 농산물 협상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02명으로 47.9%를 차지했고, 불만족도 27명으로 33.8%를 기록해 81.7%가 그간의 FTA 협상결과에 불만을 포함.

나. FTA 농업피해대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117명 (54.9%)	66명 (31.0%)	18명 (8.5%)	3명 (1.4%)	0명 (0%)	9명 (4.2%)	213명 (100%)

평점 : 1.54점 (5점 만점)

- FTA 농업피해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17명으로 54.9%를 차지했고, 불만족도 66명으로 31.0%를 기록해 85.9%가 FTA 피해대책에 불만을 포함.

다. FTA 협상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99명 (46.5%)	66명 (31.0%)	33명 (15.5%)	3명 (1.4%)	0명 (0%)	12명 (5.6%)	213명 (100%)

평점 : 1.70점 (5점 만점)

- FTA 협상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99명으로

한농연 농정이슈 보고서 (2013-01)

46.5%를 차지했고, 불만족도 66명으로 31.0%를 기록해 77.5%가 이해당사자 참여에 불만을 표함.

라.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균형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93명 (43.7%)	81명 (38.0%)	24명 (11.3%)	0명 (0%)	0명 (0%)	15명 (7.0%)	213명 (100%)

평점 : 1.65점 (5점 만점)

-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93명으로 43.7%를 차지했고, 불만족도 81명으로 38.0%를 기록해 81.7%가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불균형 심화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함.

2. 정부의 '소득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직불금 제도 및 예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42명 (19.7%)	84명 (39.4%)	66명 (31.0%)	3명 (1.4%)	0명 (0%)	18명 (8.5%)	213명 (100%)

평점 : 2.15점 (5점 만점)

- 직불금 제도 및 예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2명으로 19.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84명으로 39.4%를 기록해 59.1%가 FTA 추진에 따른 산업별 균형에 불만을 표함.

나. 정책자금 금리 및 지원 체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63명 (29.5%)	93명 (43.7%)	36명 (16.9%)	0명 (0%)	0명 (0%)	21명 (9.9%)	213명 (100%)

평점 : 1.86점 (5점 만점)

- 정책자금 금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63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93명으로 43.7%를 기록해 73.2%가 정책자금 금리 및 지원에 불만을 표함.

다. 농작물 재해 대책 및 보험제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9명 (18.3%)	108명 (50.7%)	42명 (19.7%)	0명 (0%)	0명 (0%)	24명 (11.3%)	213명 (100%)

평점 : 2.02점 (5점 만점)

-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9명으로 18.3%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108명으로 50.7%를 기록해 69.0%가 농작물 재해대책과 보험제도에 불만을 표함.

라. 농산물 물가 정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93명 (43.6%)	78명 (36.6%)	21명 (9.9%)	0명 (0%)	0명 (0%)	21명 (9.9%)	213명 (100%)

평점 : 1.63점 (5점 만점)

- 농산물 물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93명으로 43.6%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78명으로 36.6%를 기록해 80.2%가 농산물 물가정책에 불만을 표함.

3. 정부의 ‘협동조합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4명 (25.4%)	39명 (18.3%)	78명 (36.6%)	12명 (5.6%)	3명 (1.4%)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31점 (5점 만점)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4명으로 25.4%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39명으로 18.3%를 기록해 43.7%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불만을 표함.

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7명 (26.8%)	45명 (21.1%)	69명 (32.4%)	6명 (2.8%)	9명 (4.2%)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27점 (5점 만점)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으로 26.8%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45명으로 21.1%를 기록해 47.9%가 농협 경제사업에 불만을 표함.

다. 조합원 정예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45명 (21.1%)	60명 (28.2%)	69명 (32.4%)	6명 (2.8%)	6명 (2.8%)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29점 (5점 만점)

- 조합원 정예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5명으로 21.1%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0명으로 28.2%를 기록해 49.3%가 조합원 정예화에 불만을 표함.

라.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78명 (36.6%)	54명 (25.4%)	48명 (22.5%)	3명 (1.4%)	3명 (1.4%)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29점 (5점 만점)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78명으로 36.6%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4명으로 25.4%를 기록해 62.0%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에 불만을 표함.

4. 정부의 ‘농촌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삶의 질 향상 계획 이행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6명 (16.9%)	69명 (32.4%)	78명 (36.6%)	0명 (0%)	3명 (1.4%)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29점 (5점 만점)

- 삶의 질 향상 계획 이행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6명으로 16.9%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9명으로 32.4%를 기록해 49.3%가 조합원 정예화에 불만을 표함.

나.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정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15명 (7.0%)	75명 (35.2%)	87명 (40.9%)	3명 (1.4%)	3명 (1.4%)	30명 (14.1%)	213명 (100%)

평점 : 2.48점 (5점 만점)

-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15명으로 7.0%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75명으로 35.2%를 기록해 42.2%가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정착에 불만을 표함.

다. 영세고령농 기초생활 수급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3명 (15.5%)	60명 (28.2%)	78명 (36.6%)	9명 (4.2%)	6명 (2.8%)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44점 (5점 만점)

- 영세고령농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3명으로 15.5%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0명으로 28.2%를 기록해 43.7%가 영세고령농 기초생활 수급에 불만을 표함.

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9명 (18.4%)	51명 (23.9%)	78명 (36.6%)	12명 (5.6%)	6명 (2.8%)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44점 (5점 만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9명으로 18.4%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1명으로 23.9%를 기록해 42.3%가 조합원 정예화에 불만을 표함.

5. 정부의 ‘농업인력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3명 (15.5%)	69명 (32.4%)	78명 (36.6%)	3명 (1.4%)	0명 (0%)	30명 (14.1%)	213명 (100%)

평점 : 2.28점(5점만점)

-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3명으로 15.5%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9명으로 32.4%를 기록해 47.9%가 후계인력 육성에 불만을 표함.

나. 귀농·귀촌제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4명 (11.3%)	63명 (29.6%)	84명 (39.4%)	12명 (5.6%)	0명 (0%)	30명 (14.1%)	213명 (100%)

평점 : 2.46점 (5점 만점)

- 귀농, 귀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4명으로 11.3%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3명으로 29.6%를 기록해 30.9%가 귀농·귀촌제도에 불만을 표함.

다. 농업인 교육정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42명 (19.7%)	45명 (21.1%)	87명 (40.9%)	12명 (5.6%)	0명 (0%)	27명 (12.7%)	213명 (100%)

평점 : 2.37점 (5점 만점)

- 농업인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2명으로 19.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45명으로 21.1%를 기록해 40.8%가 농업인 교육정책에 불만을 표함.

라.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경영체 육성 및 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3명 (15.5%)	54명 (25.4%)	78명 (36.6%)	12명 (5.6%)	0명 (0%)	36명 (16.9%)	213명 (100%)

평점 : 2.39점 (5점 만점)

-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3명으로 15.5%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4명으로 25.4%를 기록해 40.9%가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불만을 표함.

6.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산지유통 체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7명 (26.8%)	66명 (31.0%)	48명 (22.5%)	3명 (1.4%)	3명 (1.4%)	36명 (16.9%)	213명 (100%)

평점 : 2.03점 (5점 만점)

- 산지유통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으로 26.8%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6명으로 31.0%를 기록해 57.8%가 귀농·귀촌제도에 불만을 표함.

나.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제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7명 (26.8%)	63명 (29.6%)	48명 (22.5%)	6명 (2.8%)	3명 (1.4%)	36명 (16.9%)	213명 (100%)

평점 : 2.03점 (5점 만점)

-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으로 26.8%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3명으로 29.6%를 기록해 56.4%가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제도에 불만을 표함.

다. 대형마트 규제(휴무확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6명 (16.9%)	42명 (19.7%)	60명 (28.2%)	24명 (11.3%)	12명 (5.6%)	39명 (18.3%)	213명 (100%)

평점 : 2.62점 (5점 만점)

-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6명으로 16.9%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42명으로 19.7%를 기록해 46.6%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불만을 표함.

라. 산지 거래 교섭력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7명 (26.8%)	60명 (28.2%)	42명 (19.7%)	9명 (4.2%)	3명 (1.4%)	42명 (19.7%)	213명 (100%)

평점 : 2.07점 (5점 만점)

- 산지 거래 교섭력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으로 26.8%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0명으로 28.2%를 기록해 55.0%가 산지 거래 교섭력에 불만을 표함.

7.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수입농산물 검역 및 관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4명 (25.4%)	60명 (28.2%)	45명 (21.1%)	9명 (4.2%)	0명 (0%)	45명 (21.1%)	213명 (100%)

평점 : 2.05점 (5점 만점)

- 수입농산물 검역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4명으로 25.4%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0명으로 28.2%를 기록해 53.6%가 수입농산물 검역 및 관리에 불만을 표함.

나. 한식세계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1명 (9.9%)	36명 (16.9%)	87명 (40.8%)	18명 (8.5%)	6명 (2.8%)	45명 (21.1%)	213명 (100%)

평점 : 2.71점 (5점 만점)

- 한식세계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1명으로 9.9%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36명으로 16.9%를 기록해 26.8%가 한식세계화에 불만을 표함.

다. 식품 안전 관리 체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6명 (16.9%)	45명 (21.2%)	84명 (39.4%)	3명 (1.4%)	0명 (0%)	45명 (21.1%)	213명 (100%)

평점 : 2.32점 (5점 만점)

-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6명으로 16.9%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45명으로 21.2%를 기록해 38.1%가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불만을 표함.

라. 농산물 2,3차 산업화로 농가소득 향상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30명 (14.1%)	69명 (32.4%)	57명 (26.8%)	3명 (1.4%)	3명 (1.4%)	51명 (23.9%)	213명 (100%)

평점 : 2.26점 (5점 만점)

- 농산물 2,3차 산업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30명으로 14.1%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69명으로 32.4%를 기록해 46.5%가 농산물 2,3차 산업화에 불만을 표함.

8. 정부의 '농정추진체계'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가. 지역 농정 추진체계의 정책 이행 및 기획력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45명 (21.1%)	27명 (12.7%)	78명 (36.6%)	3명 (1.4%)	0명 (0%)	60명 (28.2%)	213명 (100%)

평점 : 2.25점 (5점 만점)

- 지역 농정 추진체계의 정책 이행 및 기획력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5명으로 21.1%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27명으로 12.7%를 기록해 33.8%가 지역 농정 추진체계의 정책 이행 및 기획력에 불만을 표함.

나. 농업회의소 등 민관협력 기구 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7명 (12.7%)	54명 (25.3%)	69명 (32.4%)	0명 (0%)	3명 (1.4%)	60명 (28.2%)	213명 (100%)

평점 : 2.33점 (5점 만점)

- 농업회의소 등 민관협력 기구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7명으로 12.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4명으로 25.3%를 기록해 38.0%가 농업회의소 등 민관협력 기구 지원에 불만을 표함.

다.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연계 및 활용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7명 (12.7%)	39명 (18.3%)	75명 (35.2%)	12명 (5.6%)	0명 (0%)	60명 (28.2%)	213명 (100%)

평점 : 2.47점 (5점 만점)

-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연계 및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7명으로 12.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39명으로 18.3%를 기록해 31.0%가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연계 및 활용도에 불만을 표함.

라. 농식품 R&D 추진 체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27명 (12.7%)	51명 (23.9%)	63명 (29.6%)	6명 (2.8%)	3명 (1.4%)	63명 (29.6%)	213명 (100%)

평점 : 2.38점 (5점 만점)

- 농식품 R&D 추진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27명으로 12.7%를 차지했고, 불만족이 51명으로 23.9%를 기록해 36.6%가 농식품 R&D 추진체계에 불만을 표함.

<기타 대선공약 관련 의견 작성 조사 결과>

- 중복 의견은 삭제 -

1. 정부의 '국제 통상'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이해당사자의 합의 도출은 물론 FTA 협상에 대한 균형 조성에 힘써야 함
- 선대책 후협상 기조 유지
- 자동차, 서비스 등 무역이득에 대한 피해산업의 공유 필요
- 국제 통상교섭시 농민들의 의견반영은 반영률이 적음.
- 협상 후의 농민들에게 오는 충격과 영향평가 부족
- 정부가 선타결 후 보수 정책이 만연하고, 협상타결 이후엔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유지
- 농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도 없이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고 있음
- 농업의 일방적 피해 강요하는 FTA 추진 반대

2. 정부의 '소득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외국의 사례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직불금 제도가 필요함
- 직불금 제도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되어야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시킬 수 있음
- 재해보험의 수요·공급자 간 불신이 해소되어야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음
- 농업 유통과정에 상인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너무나 많음. 실질적인 농민 보호정책이 필요함
- 유럽은 60%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나 한국은 14%에 불과함
- 수입일변도의 물가정책은 현장 농가의 의욕 상실만 부름
-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인건비 상승
- 정부는 도시민에 대한 농산물가격 안정만 지원, 농가의 생산비 상승은 안중에 없음
- 생산량 통계에 대한 부정확성이 한도를 넘어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끼침
- 작물 보험 의무화 필요
- 정책자금 금리 0%로 하며 장기 분할 요구
- 부채지주의 직불금 수령문제 해결

3. 정부의 '협동조합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신경분리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지원되어야 함

한농연 농정이슈 보고서 (2013-01)

- 경제 사업분야를 활성화 하려면 농기계 임대 사업과 계통구매사업을 개선해야 함
- 현재 체계에서는 신용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사업에의 대농민 지원사업 강화가 필요함
- 지역농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적 발전모델이 중요한데, 중앙회의 간섭이 너무 과도함
- 농협이 수집·판매 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함
- 정부가 경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불과 모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식량의 자원화에 대비하여 농협의 영농(농작업 대행) 지원 필요

4. 정부의 ‘농촌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농촌의 고령화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농촌 고령인 기초생활수급 연금, 건강보험제도를 특단의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문화 가정이 잘 형성되려면 기존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장지향적 복지가 중요 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는 자격규정이 너무 까다로움
- 젊은 부부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여건 조성 마련 필요
- 농촌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지원 문제, 기초 수급자 등 복지 부분이 확대 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고른 혜택이 가도록 요망

5. 정부의 ‘농업인력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 전문학원과 교육정책이 절실함
- 후계농 육성은 교육, 규제 등의 정형적인 지원책뿐 아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후계농에 선정되어도 담보력이 없어 무용지물
- 체계적인 후계농 육성방안 마련 필요
- 우량하고, 비전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발굴해 경영에 도움되는 자금지원 필요
- 후계인력 선발 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6.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친환경농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중소농가의 활성화와 경영기법 유도가 필요
- 대국민적 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한농연 농정이슈 보고서 (2013-01)

- 산지거래 교섭력은 신속 정확 등 신용도가 중요함
- 농산물 품질관리 인원을 확충하여 실제 조사를 엄격히 한 농산물에 특혜가 지원되어야 함
- 도매시장, 마트 등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추진해야 함
- 대형마트는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로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치 환영하고 더욱 규제해야 함
-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에 힘써야 함
- 유통활성화와 생산된 농산물 제값 받아야 소득이 늘어남
- 유통단계를 축소해야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감
- 직거래 장터 개설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정확한 통계에 의한 계약 재배를 확대해야 된다고 봄
- 소농 또는 복합영농 농가들이 판로가 전무한 상태

7.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한식세계화, 식품안전성 2,3차 산업으로의 향상은 국내 농산물 소비와 연계되어야 함
- 농식품부로 명칭 변경된 만큼 농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함
- 가공을 겸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확대 필요
-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만이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성을 보장

8. 정부의 ‘농정추진체계’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현재 형식적인 농업관련교육이 만연하고 있음
- 농업관련 공기관 활용도를 높여야 함
- 농진청, 기술원과 기술센터 간의 품질기술 개발 연구 실적 할당 의무화 필요
- 관련 기술정보에 대한 연계가 필요함
- 농업회의소 설치, 다양한 의견 수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도농상생 기대

9. 기타 의견

- 국제곡물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료와 관련해 조사료 개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방향 제시 필요
- 체험마을 등에 정부자금을 많이 투자하는데 효과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함
- 규모농에 편중된 농정보다 대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추진
- 농업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요구함

한농연 농정이슈 보고서 (2013-01)

- 농지 이용에 대한 효율적 방안 마련이 필요
- 조사료 개발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분야는 농지 활용이 확대되어야 함
- 개발된 조사료지를 휴경 방치하면 책임을 부과해야 함

Ⅲ.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은?

1) 정부 조직개편안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기관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농림축산부로의 명칭 변경과 식품 안전 업무의 기능 조정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함
 - 그간, 식약청에서 안전 관리를 담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단순히 국무총리실 산하로 변경된다고 동 업무를 잘 수행할지는 의구심이 많이 듦
 - 특히, 위생과 방역(질병) 업무가 이원화 될 경우 농어가들에게는 이중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측에서는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함

(2) 정책 건의사항

-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 식품진흥 업무 유지 및 식품안전 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가 필요

나. 통상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이관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었음.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기업 등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로서 통상 업무까지 총괄할 경우 향후 FTA/DDA 협상에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음
 - 실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는

각 산업을 양허 제외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갈등을 빚었는데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 지식경제부 관련 산업의 이득 및 보호 관점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

(2) 정책 건의사항

- 통상 업무의 국무총리실로의 이관이 필요
 - 통상 업무는 산업 부문간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로의 이관이 필요함

2) 민간 분야 농정 참여로 농정 협치 체계 구축

가.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농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자의 성향에 따라 매번 변경되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음
 -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시군유통회사는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 성과주의형 농어업 정책으로 인해 현장 농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농업 강대국인 미국은 농업법(FARM BILL)을 통해 유럽은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자국의 농정을 5년, 7년 단위를 점검하고 중장기 농업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홍보 및 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낮아짐
 -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낭비된 사회적비용이 약 300조원에 달한다고 함
 - 박근혜 당선인도,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한 만큼,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는 당선인 공약이기도 함

(2) 정책 건의사항

-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구축하여 5년 단위 농정을 협의
 - 집권 1년차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정부 1년차까지 집행하고, 이와 동시에 향후 5년의 예산·계획을 협의 수립
 - 위원은 종합·품목 농민단체,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각종 위원회는 농업발전위원회 분과로 편입
 - 농업발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대통령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임

나.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홍보 및 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치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정부가 대표적인 시민·노동사회단체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들어 7개의 시군 단위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농어업회의소의 구축이 필요함

(2) 정책 건의사항

- 협치 농정 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 농어업회의소는 농업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연구
 - 농어업회의소는 농민 교육을 직접 수행
 - 아울러,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대 정부 요구안을 만들어 농어민대표로 협상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냄
 - 2013년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

- 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 시기 농어업회의소 대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전국 156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 2017년까지 농어업회의소 안정적 운영 체계 정착

3) 농림수산물 예산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물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이는, 국가 예산에 농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임
- 실제, 2008년 대비 2012년 국가전체 예산 지출 중 농림수산물 분야 지출은 6.2%에서 5.6%로 축소되고 있으며, 2013년 국가예산증가율은 전년대비 5.1% 늘어났는데 농림수산물 증가율은 1.4%에 불과함

<국가 예산 대비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증가율>

연도별	국가전체 총지출	농림수산물 분야 총지출	농림수산물부		
			비중(%)	소관 총지출	비중(%)
‘08년	2,572,000	159,636	6.2	139,549	5.4
‘09년	2,845,000	168,549	5.9	146,363	5.1
‘10년	2,928,000	172,571	5.9	146,738	5.0
‘11년	3,091,000	176,354	5.7	148,644	4.8
‘12년	3,254,000	181,322	5.6	154,083	4.7

자료 : 농7림수산물부

- 농업 강대국과의 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확보는 필수적임.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 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중을 10%로 확대하겠다고 한 공약을 한 사례가 있음

(2) 정책 건의사항

- 농림수산물 수출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증액

4) 경제 민주화와 연계된 FTA 추진

가. 한-미 FTA

(1) 현황 및 문제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재협상 문제 관련
 -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 당시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위험 요인에 해당되어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국민 중 대다수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광우병 쇠고기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인지한 만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수입을 중단 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재협상해야 함
 - 아울러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FTA와 별개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FTA와 연장선상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에 불과함
- 긴급세이프 가드 발동 요건과 관련한 재재협상이 필요
 - 정부는 미국산 농축산물 손질량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가격 기준은 없고 물량 기준으로 발동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량도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실제, 긴급 세이프가드의 발동은 쇠고기의 경우 1년차에 27만톤(70%)이 넘어야 가능하고 15년차에는 36만톤이 넘어야 발동이 가능함.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 35만톤에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조항임. 특히 물량기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게 들어와도 발동할 수 없고 횟수도 1회로 제한되어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미 FTA 수혜 품목인 섬유에 대해서는,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발동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상시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정책 건의사항

- 한-미 FTA 재재협상 필요
 - 수입위생조건 및 긴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등과 관련하여 재재협상이 필요함

나. 한-미 FTA 보완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인들이 실제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담보력 확대가 필요함
 -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정부는 10조 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농업인들은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장 농업인들에 담보력 확대가 필요함
- 농업용 1톤 트럭에 대한 면세유 지원 한도량을 늘려야 함
 - 농업용 1톤 트럭에 대한 면세유를 지급 자체에는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한도량이 연간 379리터(면세액 26만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농업용 1톤 트럭에 대해 면세유 한도량을 늘려야 함
 - 아울러 1개월당 배정량도 정하지 말고 농가가 필요시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함
- 실효성 있는 밭농업직불제 도입이 요구됨
 -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했으나 한정된 품목과 낮은 단가, 중복 수령 금지로 인해 현장 농가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 실제 정부는 ha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밭농업이 영세(0.45ha)하고 품목도(식량작물 19개 품목)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직불금 수령은 미미한 수준임

- 더욱이 쌀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밭농업직불금과 중복으로 신청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신청액이 예산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피해보전직불제의 전면 개편 필요

- 피해보전직불제는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90% 기준가격, 90% 소득보전) 농가들의 고통을 경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많은 갈등이 양산될 것으로 보임
- 실제, 농산물 가격이 20% 하락 할 경우 실질소득은 30%~6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 함. 아울러 피해에 대한 원인(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냐, 국내 수급 사정으로 인한 피해냐)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갈등이 양산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원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2) 정책 건의사항

○ 한-미 FTA 후속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농업용 트럭 면세유 지급 방식,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방식 개선 등 한-미 FTA 후속대책의 재검토가 필요함

다. 한-중 FTA

(1) 현황 및 문제점

○ 한-중 FTA 피해액 대한 정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 지리적 인접성, 농업의 유사성으로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해 농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한-중 FTA로 체결로 인해 시나리오별 피해액에 대해 정부는 국회 및 농업계에 자료를 공개해야 함

-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부족
 -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의견 수렴이 부족 함. 실제, 정부 차원의 공청회를 1회 개최했지만 이마저도 한농연 등 농수축산연합회로 실력 저지로 공청회가 과행이 되었는데도 협상 개시를 선언함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협상 개시전은 물론 협상 초기부터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 우려
 - 그동안 FTA는 농수축산분야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한-중 FTA는 섬유 및 생활용품 등 공산품 분야도 많은 피해가 예상 됨. 이에 정부 부처 내에 농수축산업을 대변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양허 제외를 위해 부처 내 불협화음이 양산될 우려가 큼
 - 우리 정부가 양허관세 제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할 경우, 산업 부문 및 정부 부처간 상충되는 이해 관계로 인하여 협상이 혼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협상 전에 교통 정리가 필요함

- 단계별 협상 추진 전략의 실효성이 의문임
 - 한-중 FTA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 단계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즉, 1단계 협상에서 협상 분야에 대한 모델리티 협상을,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2단계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및 양허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임
 - 그러나 협상이 벌써 2차례 진행되었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특성상(특히 북핵 협상 등) 경제 분야 외에도 정치·외교·안보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한-중 FTA가 중국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단계별 협상이 무의미하게 진행될 우려가 큼

(2) 정책 건의사항

- 한-중 FTA 협상 즉각 중단

-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이 필요함

라. FTA 무역이득공유제

(1) 현황 및 문제점

- FTA로 인해 공산품 분야는 막대한 이득을 보는데 반해 우리 농수축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됨. 실제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해 공산품 분야는 각각 연평균 8조 8천억원, 1.5조원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반해 농수축산업계는 한-미 FTA, 한-EU FTA로 인해 연간 8,600억원, 1,776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이에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농림수산물 생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 생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FTA로 인해 이득 보는 산업이 피해 보는 산업에 대해 지원이 강구되어야 공정한 FTA,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로 추진으로 국민적 호응 속에 추진될 수 있음

(2) 정책 건의사항

-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 FTA 확대를 통하여 이득을 보는 산업이 피해보는 산업에 이득을 공유하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필요함
 - (참고) FTA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안은 국회 농식품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임

5)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1)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의 정체성인 경제사업은 등한시 한 채 경제사업(신용 사업에 자본금 및 인력이 각각 90%, 85% 집중되어 있음) 신용사업에 매진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2011년 처리하여 2012년 본격 발효하였음
- 농협 경제사업의 주된 적자 요인은 다른 농수축산 유통 업체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고(1.6배~2.3배) 경제사업 자본금이 부족(신경분리 이전 신용사업으로부터 경제사업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 부담 1,070억원)하기 때문임. 신용사업 또한 시군금고 비중이 21%에 달하고(농협은행의 예수금 약 140조원 중에 30조원을 차지), 전체 농업 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64%(7.7조)에 달해 농업인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구조임

(2) 정책 건의사항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 진도 분석 ▲농협 신경분리 정부 약속 이행 점검 ▲농협은행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김 작용 여부 등 관치 농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감시 ▲수익성 치중 우려(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이후 엽연초 및 인삼 경작 농가 피해 속출) 등 3가지 분야에서 국회에서 집중 점검 할 필요가 있음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농축수산물 유통의 특성상 수확·선별·가공·포장·저장·운반·판매 단계가 있으며, 부패성이 심해 저장 비용과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음. 이에 농수축산물 유통 마진이 평균적으로 44%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농산물 유통 마진이 80%에 달함

- 이처럼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유통 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 정권은 농산물의 폭등의 주된 원인이 복잡한 유통 구조가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실제, 2010년 가을의 배추값 폭등 사태는 이상기온 등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전근대적 유통구조의 측면으로만 인식·접근하였는데, 이는 원인과 진단은 물론 대책이 잘못된 것임
- 특히,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농수축산물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지정권·관리·감독·감시 등의 기능을 모두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고 있음
-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대다수 소비자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농산물 가격 폭등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락에는 관심을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그런데 농산물의 집하를 담당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경매 가격이 폭등하였을 때 수수료도 이득도 늘어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면 출하자와 함께 이득이 늘어나는 구조임
 - 이러한 취지에서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을 농림수산물성(우리의 농림수산물식품부)이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우리나라 또한 일본처럼 농림수산물식품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서울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도매인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최대 중앙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로 인한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논의 절차가 필요함
 - 만약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도매인에게 매수 판매만을 허용을 한다거나 동일 시장 내 양 체제 병립을 금지하는 부칙 조항이 신설되어야 출하자(농업인)를 보호할 수 있음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주류 유통인 도매시장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정책 건의사항

- 도매시장 발전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이 필요함
 - 농안법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 시장도매인 제도의 보완, 중장기 도매시장발전 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농가소득 및 농산물 생산비 안정 대책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의 현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목표가격 제도로는 쌀 생산비 및 물가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농협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2012년, 김윤성외)에 의하면,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의 쌀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10a당 545,776원에서 2010년에는 434,162원으로 떨어져 111,614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 조사에 의하면 쌀 농가의 소득이 크게 하락한 것은 쌀값 하락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로 쌀 생산비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임(최근 5년간 연평균 농업용품가격지수 상승률은 6.2%)
- 실제,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지만 농자재 값(직접 생산비 15% 상승) 등 농산물 생산비는 폭등하였으며, 물가 또한 폭등(22% 상승)하여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쌀 목표가격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쌀 목표가격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농가들의 생산 의지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 생산기반 유지를 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쌀 목표가격 인상이 시급함
 - 참고로, 박근혜 당선인은 고정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공약하였는데 2013년 정부 확정 예산안에 의하면 80만원 인상에 불과하였음

(2) 정책 건의사항

-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의 인상을 통한 현실화가 필요함
 -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산정시 생산비 및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 인상을 통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함

나. 발작물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1994년 UR 농업협정 이후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발작물 위주로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발작물에 대한 소득보전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고추(270%), 마늘(360%) 등 관세율이 100%가 넘는 품목은 쌀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 HS 10단위 기준으로 126개에 달함
- 특히 FTA 피해 대책으로 시행중인 발작물직불제와 피해보전직불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만큼, 발작물에 대한 목표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한-미 FTA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발농업직불제가 도입되었지만, 큰 실효성이 없어 농가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음
 - 박근혜 당선인도 발농업직불제 단가 인상을 공약한 바 있음

(2) 정책 건의사항

- 발작물 목표가격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함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제도와 같이 발작물 가격 하락시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발작물 목표가격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함

다.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정책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약·비료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산물 생산비가 폭등하였음
-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영비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비 상승률이 일본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농업조수입 연평균 증가율(1990~2009) : 한국 3.78%, 일본 1.26%
 - 농업경영비 연평균 증가율(1990~2009) : 한국 6.38%, 일본 2.00%

(2) 정책 건의사항

-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정책 실시
 - 생산비 반값 정책(▲농자재 할인 쿠폰 제도 도입 ▲면세유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선 ▲농사용 전기 감면대책 마련)을 실시하여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농가에 절실한 2013년 맞춤형 비료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향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맞춤형 비료 정부 지원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함

7) 농업 인력난 해소 및 농업금융 부담 완화

가. 외국인 농업인력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업 인력 고령화, 숙달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농업 부문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중임.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5년(최초 3년+2년 연장가능) 밖에 되지 않아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5년 내 기술 습득이

곤란한 실정임

- 농업의 특성상 1년 1작기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산업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긴 숙련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 중 다수 품목이 연중 인력사용 편차가 큰 실정임
- 일례로, 인삼은 최소 6년 이상 수확후 관리 기술이 필요하며, 과수는 4~6월, 시설 화훼 등은 연중 인력이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가 농업 관련 전문용어의 정확히 숙지하여 농장주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려면 최소 5년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전체 산업 분야를 망라하여 시행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농업외 분야로 쏠리고 있음 (농업 분야에서 1년 근무 후 전직)

- 농업 부문에서는 숙식 제공을 포함하여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타 산업에 전직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타 산업 부문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농업 부문에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음

(2) 정책 건의사항

○ 농업 부문 고용허가제를 개선하여, 농업 부문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해야 함

- 현행 고용허가제를 농업 부문과 농업 이외의 산업 부문으로 분리해야 함
- 농업 부문의 고용허가제 체류 가능 기간을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외국어대학과 결혼이주여성 등을 활용한 외국인 농업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함
- 단기간 채용과 농업 숙련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체류 비자 완화가 필요함

나. 농업금융 부담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의 경우, 신규 농업 인력에 대한 정책 자금 금리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정책 자금은 0~2% 수준의 낮은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미국 1%, 프랑스 2%, 일본 0~1.6%)
 - 특히, 일본 정부는 농업에 취업하는 45세 미만자에 대해 연간 150만엔(약 2,170만원), 최대 7년간 1,050만엔(약 1억 5,188만원)을 지급하기로 함(가칭 : 농부 월급제)
 - 프랑스에서도 영농정착보조금 등을 통해 취농·창업농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 농어업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직불제 확충 등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

(2) 정책 건의사항

- 농업인들의 농업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함
 -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함

8) 농촌 복지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의 현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 농촌 고령농 소득보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위치
 - 농가소득 1,000만원 미만 농가는 '03(59%) → '07(62.1%)로 증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월평균 소득은 42만 2,000원, 월 평균 생활비는 32만 8,000원에 불과해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특히 도시와의 접근성과 농촌 복지 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에 비해 의료비 지원, 무상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 식사 배달 등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농외소득 증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열악한 농촌 복지 여건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영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회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2차 계획에서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했으나, 이에 따른 목표 달성도의 기준 항목 목표치가 밀돌고 있는 실정임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등 8대 공공서비스 부문에 걸쳐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2011년도 기준, 농어촌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기준 목표치인 71%를 달성하였지만, 140개 농어촌 시군 가운데 동 기준을 달성한 곳은 46개 시군에 불과한 실정임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기준 목표치 70%를 초과하였지만, 22개 농어촌 시·군은 기준 목표치를 밀돌고 있음
- 아울러 43개 세부 기준 중에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7개로 16.2%에 불과함
- 이는 지자체의 예산문제와 우선순위 책정 상의 어려움 때문이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광특회계 지원 방식의 재검토,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정착 등의 고민이 필요함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및 종합 이행지수>

지역	주거	교육	보건의료	응급	문화	종합지수
시·군	-1.33	-6.27	-62.27	-2.40	-3.74	-12.64
농어촌	-1.07	-6.33	-62.30	-2.467	-3.69	-12.5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이행지수가 '0 이상'이어야 해당 기준을 달성한 것임.

(2) 정책 건의사항

- 농촌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개별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지자체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독려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함

IV. 지정토론 및 청중토론 녹취록

1) 국회의원 축사

○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정읍·부안)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 식생활 발전 포럼은 저를 비롯한 김영록, 홍문표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어업인단체들도 저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에는 농림어업 부문 GDP 증가율이 -4.3%, 2012년만 해도 -2.2%였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5조 1천억원을 FTA 대책으로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농림예산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 해에도 농림수산업 예산을 1조원을 삭감하려다가, 저와 홍문표 의원 등의 국회의원들이 협력하여 어렵사리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해서 농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곡물자급률만 보더라도 2011년에 22%로 급격히 저하됐잖습니까? 농업정책이 이렇게 가다가는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식량이 무기화될 때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서라도 같이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

오늘 토론회 직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농업인들께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농업·농촌을 어떻게 할지, 새로운 농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압니다.

많은 분들께서 농림축산부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농업계 내외부에서 관심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김재원 간사가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당 지도부와 인수위 간부를 만나서 연찬회 장소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식품위 전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도 행안위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저는 바로 잡기를 희망하며,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최종적인 것이 국회로 돌아오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농정 문제는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농식품위가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안으로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 문제와 관련하여, 올해까지 8년간 묶어놓았는데 다른 물가는 올라갔잖습니까? 쌀 농가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행 17만 83원 목표가격을 21만원에 가깝게 올려야 합니다. 농식품위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박근혜 정부가 실천하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농기계임대법도 상임위에 제출돼 있습니다. 9개 기종이 있는데, 10일 내지 1주일밖에 못 쓰는 게 태반입니다. 이앙기는 1주일 모를 심고 내년엔 또 쓰는데, 이걸 구입하는 농민들은 1년 내내 원리금을 내면서 빚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임대법을 만드는데, 이것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과제입니다.

아울러 한-중 FTA는 눈앞에 와 있는데, 마냥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피해 농민과 축산인, 어민들에게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FTA이익공유제를 상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축산발전기금 5조원을 준비했다가 사태가 일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밭직불제를 ha 당 100만원으로 주장하지만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는데,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점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께서 농정의 문제를 선두에서 총괄하시고 이같은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김재원 간사께서 항상 야당 못지 않은 투지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윤명희 의원 또한 맹활약중입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농정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내실 있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지난 번 인수위에서 명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인수위의 개편안이 발표된 후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에 넘어왔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농림 부처의 명칭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인 ‘식품’을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농림이란 곳에 ‘식품’의 의미를 담아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식품’을 안 넣어서 농업을 안 챙기는 게 아니라, 농림에 당선인의 의지가 들어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식품’을 넣어서 개편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과거 관행을 싫어합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농업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당선인의 의중이 나타난 농업을 챙기겠다는 마음을 여러분께서 꼭 챙겨주십시오. 대안을 주시면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

저는 귀농한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농업 분야 대선공약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는데, 소외당하고 힘들었습니다. 자료집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농업 분야 평가는 인색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는 농업인들이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 겁이 났습니다. 농촌을 실제 보니 겁이 났는데, 여기 오시지 않은 농촌 출신 의원들께서는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만 볼 게 아니라, 농민과 같이 보면서 가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대표가 나오면 농민에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선진국 대비 절반도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배 이상은 되어야만 최소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조차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불금이 ha 당 70~80, 100만원을 하는데, 발작물까지 포함해도 선진국 대비 1/3, 1/4도 되지 않는데 정부는 늘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농업기술, 융자금 지원은 돈이 있어도 보증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보증을 받고 농업자금 지원받는 제도는 국회에서 고쳐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땅을 사고 시설을 사는 것은, 보증을 해 주고 저리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 농가소득이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다 당연히 적극 지원해 줘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농업기술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홍문표 의원도 지적하셨는데, 농기계 대여 문제도 있지만 지금 농산물 생산 원가가 너무 비쌉니다. 비료 가격은 표시되어야 하고, 농민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북핵 문제를 따지고 있지만, 모든 의원들이 농업 문제에 전문가가 되어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선진화시켜놓고 다음에 뭘 한다고 해야 하는데, 농촌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호사스러운 농촌이 아니더라 말씀입니다.

제가 자신이 부끄러워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못 서는 입장입니다. 김춘진, 홍문표 의원님이 앞장서시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OECD 국가 수준의 농업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주제발표

○ 주제발표 : 박상희 실장(발제자료 참고)

○ 좌장 :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

짧은 시간 동안 발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식품안전·위생분야의 문제입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도 1, 2, 3차 산업 발전 외식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작년 대비 겨우 1.4% 증가했을 뿐이고, 이외에도 FTA무역이득공유제, 농안법 개정, 소득보전직불제 등이 중요한 농정 현안입니다.

제가 농림축산부에 대한 대안을 살펴봤더니 농림식품부, 농어촌식품부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식품 분야는 농업 및 축산업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정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지정토론

○ 정덕화(경상대학교 교수)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없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서 유감입니다.

우선 박상희 실장의 발표 내용 가운데, 식약청이 안 좋은 기관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논리를 전개할 때 유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식품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같이 보는 국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보고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식약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처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조직은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은가 하는 방향으로 좀 더 지혜있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안전 업무 특히 농산물 축산물의 경우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안전 업무를 빼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경작지 대부분을 끌고 나갈 GAP 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많이 가 보는데, 과거에 ‘아, 안전 업무를 칼로 도려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전 박상희 실장의 발제도 있었지만, 농축산물은 농장에서 가공·유통·판매를 거쳐 식탁까지 농식품부가 현재와 같이 산업진흥과 안전 업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일원화를 위해서 총리 산하로 옮기는 식약처는, 식품안전 업무의 조정, 기획, 조정 및 감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총리 직속으로 하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바람직하게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식품안전 관리의 집행 기능과 진흥 기능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칼로 도려내듯이 하면 안될 것입니다.

조직의 경우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오히려 식품안전 업무를 위해서 인수위가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에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식품 업무와 의약 업무를 떼 내어서 식품안전처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조직 개편은 축산안전 업무를 떼어 낸다기 보다는 총리 산하의 약품을 떼낸 식품안전처로 하면 조직 개편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GAP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기도 한데, 김종태 의원의 말씀 중에 ‘농업정책을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농업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농촌진흥청과 완전히 분리돼서 지자체의 기술원, 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행정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오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일은 안하고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는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처럼 농촌진흥청 산하로 전문성을 가진 도 농업기술센터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일관화해서, 조직 체계가 좋은 농관원처럼 시군 농업기술센터까지 한 방향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탁명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며칠 전에 식약청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만을 모아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이 말하는 식생활 안전, 건강하고 농식품부와 저희가 기본법을 만들자고 운동을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에 강하게 토론회 개최를 만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식품, 식량에 대한 이해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고민이 들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에서 발표했던 7대 공약과 30대 과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공약도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발표했던 공약도 있고, 그 절반은 향후 공약에 준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식량안보는 당선인의 강력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란 부분이 이 식량안보에 걸립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지, 식품안전과 식량안보가 균형 있게 가야 하는데, 실제 조직개편안에는 그것이 담보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품영양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제로 가겠다고 해서, 농식품·농어촌특위로 해서 국가 의제로 농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반영된다면 사실상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

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및 청와대 개편 방안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약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당선인한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상충되는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식품 및 농어촌은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식품안전은 식량안보의 큰 틀 안에서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22.6%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안전, 규제로만 일관하고 산업 진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식량안보와 연계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와 육성은 조화와 균형을 갖춰야 마땅합니다. 일본 식육기본법을 벤치마킹했지만, 거기서는 영양이 있고 식재료가 하위 개념입니다. 이것의 상위 개념은 요리와 식사, 그것보다 더 위에는 식품과 농업, 식량이 있으며, 최상위는 자연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식생활 교육을 하면서 향후 농식품부가 식품, 다원적 가치까지를 아우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식생활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슬로우푸드를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가정 안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신설하자는 이번 개편안은 2006년의 총리실 조정안을 도식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2006년 당시에 성안되었던 내용에는 총리실 산하의 식약처가 있고, 생산 단계의 집행 기능을 각 정부부처에 위탁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당시에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식약처를 둔다고 했는데, 이 식약처의 역할을 너무 도식적으로 인식하여 갖다 붙인 게 아닌가 합니다. 최근 10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지적한 것과 같이, 식약청의 업무를 조직 확대 차원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의 발표처럼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례로 현행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의 업무중에, 식품위생

법 상에 규정돼 있는 식품진흥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기금이 왜 식약청 산하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식품산업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진흥 업무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공약 자료집을 살펴보면, 식생활 교육 확대, 영양 개선, 국내산 농식품 소비 촉진,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보조제도 도입도 있다. 미 농무부 예산 68%가 푸드스탬프와 학교 급식으로 간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위의 공약과 상충되고 있잖습니까? 애초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는 농어업특위도 식품산업 육성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식약청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례를 도입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미국 농무부의 역할은 반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상충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 식품안전 관리 문제만큼은 명확히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생명산업인 농업, 식품, 식량안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상이 필요합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서, 범국민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김연화(소비생활연구원 원장)

저희 10개 소비자단체들은 전국적으로 386개 지부도 있는 큰 조직인데, 부처의 밥그릇싸움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단체들의 철학을 담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고름우유 사건과 관련하여 항생물질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혼란이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됐고, 생산자는 허탈에 빠졌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10개 소비자단체들이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했고, 축산 분야의 식품안전·위생 기능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농림수산부로 갖고 와야 한다고 주장해서 축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위생 관리 기능을 농림 부처로 이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 2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당시 정운천 전 장관과 함께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화된 농식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 체계가 일관화된 ‘푸드체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끊어낼 수가 없고,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 시스템을 작동할 수 없게 되면 소비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농약, 미생물, 중금속 관리, 인수공통전염병,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해서 생산·가공·유통·판매까지 흘러가는 ‘푸드체인’이 올바르게 가게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와야 한다고 해서 식품산업 부문까지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부처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을 안심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의 논리로만 다루면 행정 비용만 들어서 국가적인 손실이 오고, 국민들의 불신만 높이게 될 것입니다.

개회식 때 윤명희 의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서 바로 가야 한다는 필연성과 사명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농식품위와 행안위를 찾아가면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제대로 된 위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잘 살게 되다보니 위생의 개념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안전은 불가분의 관계가 됐던 것입니다.

식품산업의 육성도 하면서 채찍도 가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규제만 가하면 산업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생산 담당 부처에서 예방을 잘 하면 안전한 먹거리는 담보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재는 계편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소비자단체와 같이 거버넌스 체제로 가면 될 것입니다. 사후 모니터링과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라도 안전한 체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떼어놓으면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소비자의 눈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고령화 사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 안전을 넘어서서 가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품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수준에 비해서 정부의 정책 기반은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행복을 열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갖고자 하는 기대치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물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우리가 많은 발전을 해서 14조원 규모가 되었고, 안전에 있어서도 광우병에 대해서 2008년에 촛불을 들고 나올 정도의 의식 수준이 됐습니다.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채워갈 수 있도록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탄 곳으로 바꿨을 때 개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철학과 전문성을 갖고 일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부실해서 도저히 안되겠다면 담당 부처를 옮겨야 하겠지만, 충분히 더 개선하고 발전할 여지가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소비자단체들이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일해 오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원천적으로 생산에서 안전 과정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추적을 할 때 제대로 잡을 수 있지만, 생산만 되고 가공·유통이 떼어지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또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 등을 체험하기 때문에, 생산품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큼니다. 아무튼 안전, 안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식품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진(민주통합당 전문위원)

인수위의 개편안대로 추진된다면,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업무 경계가 불명확할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받는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2중 규제가 우려됩니다. 2008년부터 식품 부처가 생겨서 모처럼 수출 증대되고 진흥이 활성화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행태로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 부문이 빠져나가고 식품마저 빠져나가서 농림 부처의 위상이 추락하여 식량안보와 생명산업의 중요성까지 동반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농식품부와 실무자 선에서 고민도 해 봤는데, 우선 농업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식품은 꼭 넣어야 한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둘째는 새정부가 식품안전 업무를 해야 한다는 안을 잡았다가, 새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모양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식품안전처는 표시해 놓더라도 기획 기능을 총리실이 갖고 집행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실무 부처로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5+5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도 조찬 간담회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5+5 협의체에서는 식품과 관련하여 쟁점이 있는데, 식품이란 부분도 비중이 있지만 다른 큰 사안들이 많습니다. 식품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합의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조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희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논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어떻게 맡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식품진흥에 치우쳐서 안전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 식품안전이 강화됐던 다양한 데이터는 물론 식품 단속 사례 데이터도 저희는 내놓았지만, 그 분들의 관점에서는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모두 일원화 하자고 하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주장하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충안을 모색했는데, 안전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자를 넣어서 진흥을 시키는 부분도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리를 얻는 방법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대안을 제안해서 저쪽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5+5에서 왔습니다. 식약처를 존치하면서 하는 안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님, 윤명희 의원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최규성, 김영록, 김춘진 의원님이 힘을 합쳐서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조직 개편안은 거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을 분석했는데, 공통된 공약 의제는 친환경 분야이고 나머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중 FTA에 대해선 여당은 애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하겠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중 FTA는 마땅히 폐기해야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농특위는 당선인과 여당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기 보다는, 우리는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집권했다면 그런 취지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권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을 해야 합니다. 목표가격 인상 없는 고정직불금 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업 산재보험을 하고 재해보험 확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깨끗한 농어촌 조성,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포함된 직불제(농업환경유지직불제)는 개괄적인 그림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학계에서 그림을 그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위스처럼 우리 농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이규승(충남대학교 교수)

아까 전 운태진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농업환경유지직불제는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직불제는 그린박스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직불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수질개선금을 사용한 게 10년 간 50조원을 사용했으나 개선이 안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점오염원입니다. 전체 오염원의 30%가 넘는데, 제가 볼 때 그 돈을 받아서 농경지 오염을 줄이는 기금으로 받아서 직불제로 전환한다면, 특별히 큰 예산을 따로 들일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끌어오면 효과적일 것이라 봅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5년간 식품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받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품행정을 받아온 것이 없었고, 공리만 하다가 2년이 지나가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식품진흥도 상당히 많이 되었고, 일례로 한식세계화 사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정덕화 교수는 식약청은 과학적이고 농식품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식품부에서 10년 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전문성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조직을 가진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식품을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하니까 식품도 규제가 매우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시키는 건 좋은데, 식품과 약품을 같이 갖고 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농식품부 기준과 식약청 기준은 완전히 상이합니다. 축산하시는 분은 식약청 기준으로 적용하면 모두 다 걸려서 아예 농장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식약청에서 공짜로 넘겨주게 되더라도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복잡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덕화 교수의 지적처럼,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이 매우 취약합니다. 과거 시군 농촌지도소 기능의 1/5도 안 됩니다. 결국 농업 기술의 이전, 신농업 기술 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 제대로 접목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지자체에서도 3급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해당됩니다. 모든 지자체 주관의 행사에는 100% 차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보다는 지자체 행정 단위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 봅니다.

그간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되어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상황인데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이라면서 식품위생·안전 업무를 식약처로 가져 가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농관원 원장님도 오셨지만 농관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되어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되고 외식 식품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현장은 모르면서 규제만 강조하면 잘못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저도 여야 10인 위원회 분들을 만났지만, 큰 취지에 동의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로 공이 넘어왔으니까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성만 강조해서 우를 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한농연은 2010년 4월에 이명박 정부의 농정 성과에 31.4점을 줬습니다. 물론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게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는 평가받을만한 내용 또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식품을 농정 안에 끌어들이어서 농업과 식품을 연계시킨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울러 농산업 전후방산업을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도 성과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해외농업개발, 농협 개혁 완성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돼 있으면서, 농업과 뗄 수 없는 게 식품산업 육성정책입니다. 농산물 생산과 뗄 수 없는 게 농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농식품부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 중 비판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물가 안정 정책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영세 노령농이 배제됐으므로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농정의 방향성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에서 이기는 농민을 만들어야 하고, 부단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냥 보호만 하면 지속가능하지 못하거든요. 앞선 핵심 농민들 농업경영체(한농연 멤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를 끌고 가면서, 대중 농민들이 따라가도록 해야 하고, 거기에 못 따라가는 농민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언급될 것 같은데, 물가 안정 위주의 농산물 가격 정책은 냉정히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어느 정부라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곧바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정책 효과는 신속히 나타나겠지만,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파생되는 부정적인 문제가 많고, 결국에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가는 살아 있는 생물체와 같거든요. 펄펄 살아 있는 걸 한 순간에 잡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잡히지 않는 게 농산물 물가의 특성입니다. 이 문제는 냉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이 농가소득 증대, 농업복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핵심 축으로 잡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시면, 농가소득 향상 위해서 직불제, 재해대책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고, 농업경쟁력 강화 위해서 융복합을 통한 농식품 산업 육성, 성장동력 발굴, 후계자 인력 양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복지는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 의료 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복지정책 부분은 정부에서 의지가 있고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정책과 경쟁력 강화 정책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소득정책 중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를 분명하고 냉정하게 따져서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정직불금, 밭농업직불금, 경영안정직불금 같은 것들은, 농가소득이 분명히 드러나야지만 실제 작동 가능하거든요.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또한 중요합니다. 거래 단계를 6단계에서 3

단계로 줄인다고 하는데, 유통단계 축소와 직거래 활성화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잘 압니다. 유통질서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시장 자율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자체에서 경쟁하면서 질서를 찾아나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는 유통 하부구조(도매시장, 저장시설, 선별포장시설)를 구축해 줘서 병목을 없애줘야 합니다. 유통의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공영도매시장이 주류 채널입니다. 국민들에게 신속히 농산물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지자체별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운영의 틀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관리·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한농연에서 중앙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은 해묵은 주제이지만 중요합니다. 일례로, 2013년 농업전망 보고대회를 전남에서 실시했는데, 저희들의 분석 결과 전남 무안군의 마늘 재배면적이 2천ha에서 1천ha로 줄었습니다. 반면 경북 의성군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마늘 재배와 관련된 기계화가 진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수확기가 되면 하루 노임이 15만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겠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 공동이용조직, 기계화 같은 것이 진전되어야 합니다. 신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농촌 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력은행을 하면 골고루 인력이 배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정이 변화무쌍하고 정치적이란 것입니다. 정책 일관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이런 수준인데, 미국은 농업법, 유럽은 공동농업정책이라고 해서 5~7년의 중장기 정책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는지요? 우리나라의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중장기적 농업정책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농업발전위원회에서 그 일을 해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정은 협치가 중시될 것. 농어업회의소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청중토론

○ 정명채(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

유럽은 식품안전관리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것은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독일이 15년 전에 농림성 명칭을 소비자 보호 및 식품농림성이라 바꿨습니다. 식품안전관리는 토양과 물, 종자 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관리하려면 토양에서부터 친환경농업부터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 부처가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 떼어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80%의 농산물 중 상당수가 상당히 위험한 불임성 GMO, 고엽제 내성 GMO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불임이 되고 아토피가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이대로라면 수입업체, 수입회사만 좋자고 만드는 게 아닙니까? 카길이 우리나라 수입곡물 중 80% 담당하는데 카길만 좋은 일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식품안전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처를 별도로 만든다면 이건 편법이라 생각됩니다. 농림 부처 내에 별도의 청이나 국을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농어업회의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UR 협상 초안을 만든 게 당시 카길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ISD(투자자-정부 소송 제도) 조항을 만든 게 아닙니까? 이걸 막아내려면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서 자치 농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농업은 손해입니다. 아울러 농업노동재해법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 유대명(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부회장)

한-중 FTA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중단하고 좀더 농업에 제도적인 뒷받침, 나아가 농업 회생을 위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추후에 한-중 FTA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추산대로 하더라도 한-미 FTA가 피해 추산액이 8천억원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1조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중 FTA는 더욱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

에, 이걸 즉각 중단하고 선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유리온실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생산 단계에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까 전 정명채 박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대기업들이 종자 산업에 치중해야 하는데, 생산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은행의 매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도적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7년 정도 상환 기간을 두는데 못 하면 3년 연장을 하는데, 15년 정도는 돼야 하고, 어려우면 3년 추가 연장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결부되어서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8년 이하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책적 결림돌이 있어서 자금을 받지 못하고 제약이 있어서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개편을 해서 경영회생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백(선농회 사무총장)

첫째, 한-중 FTA 관련해서 경제2분과 인수위 위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안와 있어 저는 유감입니다. 관심을 갖고 투명성 있게 농업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FTA무역이득공유제는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농어업회의소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까지 감안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 이상식(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은 완벽히 수립될 수 없음은 잘 압니다. 아무리 반농민적 정부라 하더라도 정책 중에는 잘된 것도 있고 못한 정책도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선부른 정부조직 개편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의 최말단 공무원 농민들은 헛갈려서 고생하고 허송세월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방청객

몇몇 지정토론자들께서 식품산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양식품이 공업용 유지를 갖고 와서 정제해서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정제된 제품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당국과 매스컴이 문제 삼아서 그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오줌에서 유로카이나제를 빼내어 의약품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화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공업용 유지는 왜 문제가 됐을까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식약청과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시에 하도 울분이 터져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을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그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제대로 보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품산업은 망할 것입니다.